

丁의장 “임시국회 성과 내야”

우원식 “국회 파행, 여당으로서 죄송스러” 김성태 “야당 무시에 할복하고 싶은 심정”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6일 여야 3당 원내대표와 만나 2월 임시국회에 서 민생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과 회동을 갖고 “1월 까지 담겨가면서 2월 임시국회를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손에 쥘 게 없어서 참으로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제20대 국회 전반기는 사실 4월 임시국회 하나만을 남겨놓고 있을 정도로 시간이 다 가고 있는데 법안을 산적해 있고 정쟁 현안을 처리되지 않았다”며 “며칠 남지 않았지만 2월 국회에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야 대표들

이 특별히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민생국회를 만들겠다고 했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질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시간이 이제 밖에 없다고 했는데 아직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지방선거를 대비한 공직선거법, 민생 관련 법안들도 많은데 국회가 정상화 되지 못한 데 대해 여당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남은 기간 동안 이런 일들이 잘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것들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 겸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남 등을 문제 삼아 대외 공세에 열을 올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의 주범인 김 부위원장을 군사작전 도로까지 열어주면서 그를 국민급으로 모시는 작태를 보여 현안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낀다”며 “김 부위원장이 어떻게 한국 땅을 밟게 됐는지 그 배경과 사전 작업 등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상대로 긴급현안 질의를 하려는데 간사간 협의가 중요하며 이것도 수용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국회가 사라진지 오래고 요즘엔 그도가 지나치다. 국회가 무기력하고 무능한 기관이라는 국민의 비판이 하늘을 찌른다”며 “저도 정치를 오래 해왔지만 이렇게 철저히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야당을 무시하는 걸 보며 제 야당 원내대표로서 정말 할복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생국회를 약속했던 2월 임시국회가 김영철 방남 파동으로 인해 민생국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고질적인 이념정쟁으로 국회가 무력화되는 거대 양당정치로 또다시 회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부위원장의 방남과 같은 중추적인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갈등을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저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와 여야 의원들과 소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법 122조에 근거해서 긴급현안질문을 할 것을 정 의장과 여야 각 당 대표들에게 제안한다”고 했다.

뉴스



발언하는 조배숙 대표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민주평화당 전국여성위원회의 미투운동 지지와 제도적 대안 마련 관련 기자회견에서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北김영철 방남 일정·동선 ‘함구령’...여론 악화 우려

회담 내용도 극히 일부만 공개...사진·영상 공개 無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 겸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일정과 동선 등에 대해 정부가 이렇게 ‘함구령’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일정·동선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물론 회담 내용도 극히 일부만 공개하고 사진이나 영상 등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김 부위원장 일정과 관련, “당국자 간 비공개 일정들이 있었다”며 “사전에 일정을 알리지 않을 거 같다. 다만 사후에 일정을 해당 부처가 봤든 청와대가 봤든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비공개라기보다 확인해 드릴 시간이 있는 경우에 알려드리는 것”이라며 “그 전까지는 그렇게 확인해 드릴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건이 되는 대로 알려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렇게 김 부위원장의 일정·동선 등을 비공개하는 것은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방남했던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대조적이다.

당시 청와대는 김 제부부장 일행의 일정을 공개하고 회담 내용과

사진 영상 등도 함께 제공했다.

반면 김 부위원장의 경우 천안함 폭침 사건 배후로 지목돼 야권과 보수단체의 반발이 거세고, 사진이나 내용 등을 공개할 경우 자칫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일정과 동선 등이 알려질 경우, 야권과 보수단체 등의 시위로 경호상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 최대한 김 부위원장의 언론 노출을 자제하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전날인 25일에도 문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의 면담을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했지만 이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회동이 끝난 뒤 서면으로만 브리핑했다.

미 전문가들 “올림픽 후 한미 동맹 악화 될 것”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해 방남한 북한 대표단이 “북미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밝힌 가운데 올림픽 이후 북한과의 대화공세를 위해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관계가 악화될 것인 우려가 나왔다.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은 26일(현지시간) 뉴욕 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한 대북압박 노력과 분명히 뜻이 잇달리는 행보를 하면서 워싱턴 내에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두 동맹국의 정상

간의 심각한 의지의 충돌로 귀결될 수 있다”며 “두 동맹국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전문가인 존 딜러리 연세대 교수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의 긴장수위가 극적으로 낮아지고 한국이 게임의 핵심 선수로서 역할을 회복했다”면서도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 중재자가 되게 할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NYT는 트럼프 정부 내 일부 관리들은 미국이 이제는 남북한 간에 실행가능한 외교채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미국의 북극을 위

해 그 것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첫단계는 미 정부가 북한을 향해 ‘보다 일관된 메시지를 정하는 것(settle on a more consistent message toward North Korea)’이라고 관리들이 말했다는 것이다.

서호주대학의 퍼스 USA아시아 센터 책임자인 고든 플레이크는 “문재인 대통령은 나이브한 사람이 아니다”며 “한국 국민들은 총통로 이어지는 계도를 질실하게 바꾸고자 하는데, 동시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 너무 큰 괴리가 생기지 않는 것도 바란다”고 지적했다.

NYT는 한미관계의 첫번째 도전은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한미 연례 합동군사훈련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림픽도 끝나고...MB 곧 소환 될 듯

뇌물·횡령 등 적용될 듯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검찰이 사실상 결론 내림에 따라, 적용 혐의 역시 구체화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뇌물수수, 횡령·배임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변수로 작용했던 평창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린 만큼 조만간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최근 이 전 대통령 ‘재산 관리인’ 이병모 정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 주주’라고 명시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물음에서 시작한 이 사건 수사가 종착점에 다다른 모양새인 것이다.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검찰 판단에 따라 뇌물 혐의 적용이 무게감 있게 거론된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소송 비용 40여원을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이 투자금 140여원을 회수하기 위해 청와대 등 정부기관을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이 점쳐진다. 투자금 회수 과정은 김재수 전 LA 총영사 등은 투자금 반환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투자금 회수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문건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인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구조는 아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뉴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무료상담환영”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